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 도입... 내년 총선 적용 '촉각'

여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공감
국회 정개특위, 관련 법률안 심사
세부사항 두고 여야·의원간 이견
국회의장 "3월 중순까지 정할 것"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화두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화답했다. 현행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여야가 공감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예정했다. 여야가 제출한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내년 총선부터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오는 3월 중순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에서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의원 전원회의에 회부해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할 것이라는 김 의장은 "선거 제도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며 "호남에서 보수 정치인, 대구·경북에서 진보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물론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 조율하는 게 쉽지 않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발의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선거법 개정안 핵심은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 비례대표제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선거구제(정당·후보 모두 선택, 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4~9인 대선선거구제(일부 농·어·산촌은 3인 이하) ▲권역별 비례대표제(지역구 220석 축소, 6개 권역 비례대표 110석) ▲4~5인 지역구 대선선거구제(준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병립형 전국 비례대표 46석 혼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여야에서 각각 발의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에서 2~4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사표 방지 ▲지역주의 타파 ▲정당 내 다양성 보장 등이라는 장점을 고

려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표가 줄어드는 대신, 인지도에 따라 당선 순위가 결정돼 정치 신인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커지면서, 유권자들을 대표하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제도가 달라지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는 국회의원 또한 생길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지만,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이뤄지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정개특위 소속 당 의원들과 간담회

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도 들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다당(多黨),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말한 적 있는데,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당 정치혁신 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원외 정당인 진보당도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치 개혁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유권자의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다당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 방안으로 규정한 뒤 권역별 대선선거구제(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없는 죄 조작, 사법 쿠데타... 정권의 역주행" 심상정 "시중銀 대출 2%, 서민 대출 할당"

'성남FC 의혹' 이재명 검찰 출석

"李 제거에만 혈안, 유례없는 탄압"
"檢 왜곡·조작 상상 초월" 결백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통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당 지도부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찾아 정견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약 50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두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과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꿨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고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며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



이재명 대표 '입장 밝힐게요... 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비속어를 쓴 시민을 향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들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 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며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 유치해서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 유치해서 성남

시민의 세금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맺고 광고를 해서 받은 광고대가 광고비를 균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긴다"면서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 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행위처럼 만들고 있다.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너노릇을 하다가 이젠 권력과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법정 최고금리 27.9%인상 비판
고금리 시대 특단 대책 마련 주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를 거치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시중은행이 대출의 2%를 서민 대출에 할당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상 재고 등의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1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금융위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가뜰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에 서민 사채알선에 나서는 일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가 약탈복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 대부업체나 개인 사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1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신용등급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고소득층이 금융부채를 이용하는 경우는 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것인 반면, 저소득층은 생계비 때문에 돈을 빌린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시기 국내 은행이 사상 최대규모의 이윤을 얻었음에도, 5대 시중은행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1%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서민 등, 한쪽의 고통이 한쪽의 폭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

의 공공성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무기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 규모 중 1~2% 정도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에게 할당 ▲시중금리 이하 대출을 제공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확대에 서민 생계 지원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확대 실시를 제안했다.

심 의원은 "작년 6월 기준 대부업 대출 규모는 평균금리 14% 기준으로 약 15조8746억원에 달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 1396조원 중 1~2%만 저신용자에게 대출하면 약 14조에서 27조 정도 사이로 충분히 서민들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해 은행들이 서민대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은행들의 자금 운용은 사회적 성격을 갖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고객의 돈"이라며 "그래서 금융기관은 상업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것이다. 공공성을 근거로 규제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중앙은행의 준비금 제공, 공적자금 투입 등의 정책도 시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저신용 서민대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혹여나 정부가 이런 주장을 앞세우지는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